



5면

수소서비스안전 협력체계 구축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음 3월 26일) 제3729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 광역교통망 확충, 전북 발전 새 전환점

### 대광법 개정안 공포

도, 후속 절차 본격 착수  
산업 유치·정주환경 개선  
지역경제 긍정적 파급효과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28년의 설움을 딛고 역사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2025년 4월 22일 정부 관보에 공포되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박희승·이성운·이춘석(가나다 순, 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승우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정현을 익산시장, 김희욱 김제시 부시장과 김대중 도의회 경제건설산업상임위원장과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후 2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자치도에서는 개정 대광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광법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명확히 대도시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교통 정책 틀을 깨고, 전북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교통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교통 정책의 권한과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데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2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이춘석·이성운·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북도민 숙원사업인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더욱 가까워지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대광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 교통 정책의 자존심 회복"이라며, "유일하게 광역 교통 정책에서 배제됐던 전북이 드디어 제도권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지금부터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며,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확보, 신규 사업 추진 등 다수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회복의 시작"이라며 강한 의미를 부여했다. "균등한 국민 생활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는 전환이 이뤄졌다"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대광법 공포는 전북에 오랜만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뭉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하계올림픽 유치 등 향후 현안들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의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김관영 지사는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전주권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며, "전북의 위상과 수요가 온전히 반영된 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되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교통 수요 조사,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북은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처럼, 광역 교통망의 확충은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며,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대광법 개정안은 법률 제 20936호로 공포됐으며, 향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북자치도는 이 기간 동안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 추진, 교통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 등 실무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최  
추경예산안 등 처리 예고

내달 7일까지 15일간 일정  
총 3817억 규모 추경안 심사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중단  
축구 결의안 등 안건 심사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18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5월 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23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각종 의안 및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청(약 2,311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 1,506억원)의 총 3,81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5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전략·집념·공조로 국비 확보 총력을”

김관영 도지사, "대광법 개정안 공포 후속조치 만전" 강조

임없이 소통해 설득하는 '절박한 노크'와 끈질긴 토크 전략, 세번째, 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원팀 전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권이 포함된 대광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된 것과 관련해, "이번 개정은 전북이 그동안 소외돼 왔던 교통정책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물꼬를 트는 계기

가 된 만큼, 실질적인 혜택과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팀별 벤치마킹 시즌4 민생편 보고가 마무리된 데 대해 "도민의 삶을 한층 더 운터하게 만들기 위해 민생과제 발굴에 깊이 고민해준 직

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예산 속려, 제도 제안, 연계 적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제를 정교화해 한 단계 발전된 프로젝트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도, "후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략 실행과 논리 보강에 착수하고,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